

2000년도 환경정책 추진방향



남재우
환경부 총무과장

1. 서 언

새 천년이 밝았다. 반복되는 날이고 해(年)이지만, 2000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지난 천년대를 마감하고 꿈과 희망의 새로운 천년기가 시작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새 천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새 천년을 풍요의 시대로 예견하고 가슴 설레이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과 희망은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 지구촌은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 이로 인한 산업문명의 만개(滿開)와 확산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며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발달은 창의적 혁신역량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고 있다. 또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세계 경제가 형성되어 이제 하나된 세계, 지구촌(地球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성장과 풍요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과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로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분수(分數)를 넘는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의 한계를 넘어 자원을 남용하고, 원하는 대로 편한 대

로 쓰고 버리는 생활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환경위기의 연방

환경위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의 증가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구의 기온은 0.3~0.6℃, 해수면은 평균 18cm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대홍수, 가뭄, 폭설 등의 기상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 등에 쓰이는 프레온가스(CFCs)가 성층권(지상 15~25Km 상공)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등 유해광선 증가로 피부암 안질환, 인체 면역기능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종의 14%, 조류와 포유류의 11%, 어류의 1/3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면서 복잡하고 미묘한 생태계의 균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생물자원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잠재적 혜택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환경문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조밀한 인구밀도, 강우량 편중 등의 열악한 환경용량으로 인해 환경관리에 원천적으로 불리하다.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단위 면적당(單位 面積當)' 환경오염 부하를 보면 미국의 약 50배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고도 압축성장 과

정에서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 내에 급격히 악화되어 왔고 총 인구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6대 도시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어 도시의 환경관리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4대강의 수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청정연료와 저유황유의 보급을 확대하여 아황산가스나 먼지는 줄어들었으나 자동차 보유대수가 이미 1,100만대를 넘어서면서 오존오염과 같은 선진국형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리에 꼭 필요한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 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들 시설을 적기(適期)에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21세기 환경정책방향

21세기에는 지난 세기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공존과 조화, 환경친화의 가치관을 만들어가야 한다. 새 천년의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생태중심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열어갈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사고의 확산, 공급 중심, 팽창위주에서 수요관리와 효율중심의 환경정책으로 전환, 사후대응적 환경관리에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로 전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분권화된 민주적 절차, 자율관리행정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지면 관계상 21세기의 환경정책방향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개별 환경정책의 줄기가 되는 기본원칙과 방향만을 나열하기로 한다.

첫째,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수요관리, 효율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환경행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환경기술과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여섯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끝으로, 환경관리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다.

4.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

가.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 제시

21세기 환경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금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간 산업화에 의한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성에 따라 21세기 환경문제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 청사진을 담은「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을 2000. 6.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21세기에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상을 전망하고, 각 분야별로 이에 대한 능동적 적응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21세기의 환경여건 속에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명사적 전환기에 맞추어 새로운 윤리·가치관을 모색하고, 토지제도 및 국토이용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제정치질서의 변동과 재편에 따른 환경운동의 세계화와 NGO의 역할강화, 지방화시대의 환경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에코밀레니엄 시대의 문화·윤리·가치관」, 「자원절약적 생산소비체제」, 「환경친화적 과학·기술문명」, 「한반도 생태공동체」등 5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연구를 위해 관련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에코밀레니엄 국

가비전 연구단) 및 분야별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새천년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 전략과 실천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국제적인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 「환경보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합의(Consensus)를 이루어 나가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나. 4대강 유역의 수질관리체제 확립 및 물절약 운동 전개

「한강수계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변구역내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상류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3개 시군(광주, 양평, 이천)의 오염총량관리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최근 확정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금강·영산강수계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대책추진의 근거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4대강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하천·호소의 수질환경기준을 21세기 새로운 여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균형적인 국민 생활향상을 위해 급수 취약지역인 농어촌·도서지역·중소도시 위주로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을 추진하며 금년 중 농어촌 50개소, 도서지역 26개소, 중소도시 30개소에 886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농간 생활용수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00년 중 노후상수도관 2,585km를 개량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6개에 대한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노후상수도관 개량 예산 1,346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예산 120억원을 마련하였다.

한편,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선진국보다 많은 1인당 물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한다. 절

수대책을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신규주택은 수도꼭지 등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공공근로사업 및 국고를 지원하여 절수기기를 설치토록 할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누진율을 강화하여 절수에참여토록 유도하고 노후수도관도 점차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여 나갈 것이다.

다. 친환경적 국토이용체제 구축

환경문제는 토지이용에서부터 비롯되므로 국토계획과 환경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적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건설·정비 등 물리적 계획에만 편중되어 도시의 환경문제가 고려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의 이념을 도입하여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과 환경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입안시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도시계획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개발사업 추진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형개발사업의 환경친화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법이 제정('99정기 국회)됨에 따라 평가서 작성의 단일화 및 평가절차의 통일화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고시 등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공기는 한 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환경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등 오염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도시의 공기오염은 국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심화되었다.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 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서울 85%)이며 특히, 대형 경유자동차가 문제이다. 전체 자동차의 4%에 불과한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공해의 47%를 차지(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의 50배 배출)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또한,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매연 등은 오존오염과 시정장애 현상을 가중시키고, 폐질환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폐암 발생환자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점도 이와 같은 대기오염에서 주로 기인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범인 대형 경유차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에서 운행빈도가 가장 많은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 충전소 입지기준 마련 등 기반정비를 하였으며, 2000~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중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서울 및 6개 광역시, 수원)의 노후 경유시내버스 5천대(충전소 100개소)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어 2007년까지 대도시의 나머지 경유사용 시내버스 1만 5천대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이다.

마. 폐기물의 적정관리

폐기물감량제도의 정착 및 생활화를 위해 1회용품·포장폐기물 억제제도의 이행확보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1회용품 규제대상의 확대, 봉투·쇼핑백 이상판매제 시행, 포장검사명령제 도입 등으로 1회용품·포장폐기물 감량제도가 상당히 개선·보완되었으나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도 3개월까

지 이행명령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제도가 완전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따라서 위반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강제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0년 중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를 대상으로 재활용수수료를 부담시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자원화를 촉진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자원화시설을 갖춘 곳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68개소(매립 21, 소각 47) 설치하는 등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처리시설 설치·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설치를 억제하는 한편, 대규모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 상반기에는 1일 50톤미만 소각시설에 대하여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일원화를 도모하고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폐기물관리대책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컴퓨터, 단말기, TV 등 수명이 짧은 첨단제품은 생산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개선토록 하고 생산자가 판매대리점·자체 재활용시설 등을 통하여 처리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바.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와 환경기술개발 지원

환경·노동부 등 7개 부처 13개 법률에서 다루는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유해화학물질 기본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유해물질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관련 독성정보 등을 분석하고 화학물질 오염지역의 내분비계 잔류실태 등을 조사하여 정밀 재조사사업을 전개하는 등「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분비

계 장애물질의 어원·정의·용어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화학물질 중 유통량이 많은 20~30여종에 대하여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OECD에서 수행중인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사업에도 참여하여 국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기법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기술 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를 위해 범정부적인「환경기술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의 유관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사용 장려금제 확산, 환경시설 설계·입찰제도의 이행관리 강화, 무실적 신기술의 실증사업 성공불제 정착, 신기술사용 입찰시 가점제 적용,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17개 업종으로 세분화된 환경산업의 관리체제를 정비하여 환경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 자연자산의 체계적 보전

정확한 자연환경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국의 육상과 해안선의 지형경관·식생, 동식물 분포현황 등 자연생태계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 종합 GIS-DB 구축 및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활용할 것이다. 동식물분포도, 조사보고서, 영상자료를 GIS-DB로 구축하고 전국 자연환경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생태자연도』를 단계적으로 작성(2000~2003)하여 식생도, 야생동식물 분포도, 경관분포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여 자연환경보전 관리체계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야생동·식물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밀렵·밀거래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도도 만전을

을 기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연원시림 및 습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네트워크 등 생물종 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평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는 등급화하여 관리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백두대간보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인 바, 백두대간의 자연현황 및 훼손실태 등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구사업을 착수(2000~2002)하고 백두대간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다.

아.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대응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을 위해 「지구온난화방지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매립시설·소각시설·폐수처리시설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저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00.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 메카니즘 운영규칙, 의무준수체제, 개도국 능력형성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협상전략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에의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의 역할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21세기 동북아 협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여 동 회의를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중추적 기구로 활용할 것이며 세계은행과 환경회계 및 환경경영방식 개발 등 협력사업 추진, OECD, UNEP 등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며 환경·무역 연계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5. 결 언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외부의 사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면 지난 세기 동안 자연은 인간밖에 존재하는 외적 환경이자 정복과 개발의 대상일 뿐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쓰고 버리는 것이 미덕이 되고,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해 왔다. 아울러 유한한 자연자원의 무한한 착취가 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적, 사회 경제 제도적 접근이 전부가 아니며 환경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반성하고, 거기서 새로운 환경윤리를 정립하는 가치 이념적인 대전환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있다. 늦기 전에 인류 생존의 문제로 환경위기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인간중심적 세계관, 기계주의적 자연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생명중심주의적 세계관, 유기체적 자연관, 정신주의적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의 이웃과 미래 세대, 또한 이 땅에 함께 살아가야 할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環境保全**

약 력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77년 제20회 행정고시 합격
- 1977년 경기도 근무 (사무관)
- 1984년 환경청 국립환경연구소 및 폐기물처리과 (사무관)
- 1987년 원주환경지청 계획과장
- 1989년 환경청 법무담당관
- 1990년 환경처 소음진동과장
- 1993년 환경처 자연정책과장
- 1995년 환경부 해외협력과장
- 1996년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 1998년 환경부 감사담당관
- 1999년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현 환경부 총무과장

새 가 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종 회 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백산개발㈜	정종득	경북 영동시 일직면 평팔리 429	승정원목재	송성현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665-3
	㈜신영	조영민	경북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440	서양석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9	
	삼고엔프라	김영준	경북 영천시 고경면 괴계리 385	신일케이알	이재기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생리 626
	㈜수도	이희락	대구시 북구 관음동 1338-6	(합)우영개발	김창현	경북 문경시 점촌동 389-4
	신개발환경	이석보	경북 경산시 임명면 부적2리 108-43	환경농장	김성근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658
	㈜서강기업	권혁동	대구시 달서구 현동읍 원교리 1731-21	종합연미도금	천종봉	경북 경산시 임명면 신대1리 230
	㈜원호환경	윤천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1919-18	울산대원정비	김영호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436
	㈜문경	이원영	경북 문경시 신암면 봉성리 89-1	포항대수열처리	최동용	경북 포항시 남구 연암읍 오천리 162-8
	한국이과씨㈜	전주매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29-1	도동종합정비공정	문장복	경북 영천시 도동 601
	대성산업㈜	최운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암읍 오천리 606-3	경북종합정비	김영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연리 995
	남경모직	남기명	경북 경산시 자인면 옥천1리 126	홍국희	경북 상주시 화계동 5-5	
	형제건설	임재섭	경북 영천시 채산동 629-1	그린종합정비	임성대	경북 영천시 오수동 409-8
	임석산업사	김민석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483-3	다인소개㈜	박종래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133-13A